



광주·전남경찰청은 18일 오후 6월3일 치러지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과 전담팀을 꾸렸다.



사진=광주·전남경찰청 제공

광주·전남경찰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단속 본격화

광주·전남경찰이 올해 6월3일 치러지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과 전담팀을 꾸렸다.

광주경찰청은 18일 광주청과 지역 내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전남경찰청도 전남청과 각 산하 경찰관서 22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팀 운영에 나섰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경찰관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개시 5대 선거범죄 집중 수사... 딥페이크 선거범죄도 엄단

유지, 각종 선거범죄에 선제 대응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한다. 일선 경찰관서 단위로 관련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중대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인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한다.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업해 선거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온라인 선거 범죄가 선거에 미치는 과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관련 사건은 각 지방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주민의 뜻을 지역행정에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수사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5·18부상자회·공로자회 보조금 유용·횡령 간부진 법정에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전직 임원진들이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을 각종 수법으로 부정하게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1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 전 공로자회장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황 전 회장은 2023년 5·18부상자회장 재임 당시 다른 간부들과 공모해 정당한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자격 요건(운

전면허)이 없는 지인들을 단체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보훈부를 속여 국고보조금 1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공로자회장은 업무용 차량 구매 보조금 4000만원 중 차량 렌탈비 비용으로 지불한 차액인 3200만원을 보훈부에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직원을 허위 채용해 보조금 일부인 787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회 복지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던 이모씨는 단체 업무용 중과차 3대를 구입한 뒤 가족과 함께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차량 매매계약을 꾸며 내 잔액을 가로채고 업무용 카드로 개인 채무 300만원을 갚는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다른 부상자회 간부 최모씨는 공법단체 전환 과정에서 운영비 명목 단체 공금을 16차례에 걸쳐 2억37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단체 운영 과정에서 회원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이씨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허위 결제를 해 준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회장과 이씨를 비롯한 5·18부상

자회 전직 간부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정 전 회장은 "단체와 개인에 오점을 남겨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나머지 피고 3명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거나 증거 조사에 동의, 이날 변론을 종결기로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2억여원 대 횡령을 저지르고 반환한 최씨에 징역 2년을, 보조금 유용에 연루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황 전 회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고 오는 4월16일 오후 속청 재판을 열기로 했다. /뉴스

'광주의 강남' 봉선동 위장전입... 시민단체 신고센터 운영

공립 중 과밀학급은 불로초·조봉초 단 2곳... 학습권 침해·부동산 상승·입시 과열 부작용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의 부정 입학(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7일 봉선동에 위장전입 근절 예방 현수막을 내걸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중 하나로 과밀학급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부동산 시장 상승,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봉선동 불로초등학교와 조봉초등학교 두 곳의 과밀학급 현상은 여전하다.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중 과밀학급이 있는 곳은 불로초와 조봉초 뿐이다. 불로초는 2학년 30.5명·4학년 28.5명·6학년

28.3명이고, 조봉초는 3학년이 30.2명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권장 기준은 1~4학년 20.4명, 5~6학년 24.7명인 데 반해 불로초와 조봉초 모두 훌쩍 넘는다. 올해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19.5명이다.

교사와 남구청은 초등학교 과밀학급의

원인으로 위장전입을 지목하고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도 위장전입 목격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스가 위장전입 문제를 심층보도(뒤뜰린 교육열, 불법전입)한 후 남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협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다보니 위장전입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의 항의나 민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

장애인권리법 '탈시설화' 한 줄... 국회 결단만 남았다 나주 한 장애인 25일 조국 대표에 호소문 전달 장애인들 "법안 핵심 '탈시설화' 꼭 지켜달라"

전남 나주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탈시설화' 권리 명시를 촉구하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0년 논의 끝에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 법안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과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 장애인 정책 추진 체계 등이 담겼다.

나주 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상준 소장은 1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25일 나주를 방문하면 정수루(正綴樓)에서 만나 호소문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신에는 사실 중심의 삶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탈시설화의 필요성이 담겼다.

박 소장은 서신에서 "시설은 누군가에게는 보호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창문은 있어도 바람이 들지 않는 방과

같았다"며 "밖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그 바깥으로 걸어 나갈 수는 없었던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사람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시설은 의식주를 있었지만 '나의 의지'가 머물 영토는 없는 곳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그 섬을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시민의 영토로 돌아오기 위해 오랜 시간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조 대표와 만나는 장소인 정수루는 조선 선조 시기 나주목사(牧使)였던 학봉 김성일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북을 걸었던 곳으로, 한양의 신문고에 대응하는 '지방의 신문고'로 불린다. 이곳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박 소장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시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꾸준히 주장해 온 당사자다.

그는 "완벽한 법을 포기하고 장애인 내일을 선택했다"며 "살점을 드러내듯 문장을 깎아내 단 한 줄 '탈시설화'만 남겼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한 줄'은 법안 제19조에

담긴 '탈시설화' 관련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장애인이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일부 법안에는 '시설수용 종식' 등 보다 강한 표현이 포함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 논의를 거쳐 '탈시설화'라는 표현으로 조정했다.

장애계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후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국 법 제정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는 데 뜻이 모였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법사위가 통상 자구와 체계를 정리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구 수정"이라는 명목으로 핵심 문장인 '탈시설화'가 삭제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상임위 논의를 뒤집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박 소장은 서신에서 "상임위라는 파도는 넘었지만 이제 법사위라는 마지막 좁은 문이 남아 있다"며 "이 가느다란 한 줄이 다시 베어 나가지 않도록 국회와 그 문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반 서신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선다. 400년 전 정수루의 북이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관청에 전달하는 통로였다면 이번 서신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10년간 쌓아온 요구를 정치권에 전하는 '현대판 신문고'로 평가된다.

장애인 복지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장애인 정책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사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 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중심으로 한 권리 기반 체계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라는 의미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최종 제정된다. 박 소장은 "쟁점은 하나"라며 "탈시설화라는 단 한 줄이 남느냐, 사라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